

지역 성 인지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 센터)

이 글의 목적은 지자체 여성정책 환경과 지역 통계 생산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성 인지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참여 확대, 자율적인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지역 성 인지 통계의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을 명시한 개정 통계법 시행과 통계청의 적극적인 지역통계 개발이라는 지역 통계 생산 환경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성 인지 통계 정보 확대를 통해 위와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성 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지역 성 인지 통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 현황

1.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승인통계 작성 현황

2008년 7월 1일 현재 총 940종의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393종의 국가승인통계가 246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있음. 이 가운데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지정통계가 16종, 일반통계가 377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는 조사방법별로 살펴보면, 조사통계 101종, 보고통계 262종, 가공통계 30종 등임.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의 보고통계 206종은 전체 보고통계의 51.8%를 차지하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국가승인통계의 6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승인통계에서 보고통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1>, <그림 1> 참고).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별 통계, 성별 분리 통계, 남녀별 통계는 성 인지 통계와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성 인지 통계의 하위범주에 속함(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성 인지 통계와 성별 통계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음.

〈표 1〉 국가승인통계현황: '08.7.1 현재

(단위: 기관, 종)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59	940	94	846	367	506	67
통계청	1	63	46	17	51	1	11
중앙행정기관	37	315	16	299	105	200	10
지방자치단체	246	393	16	377	101	262	30
기타 지정기관	75	169	16	153	110	4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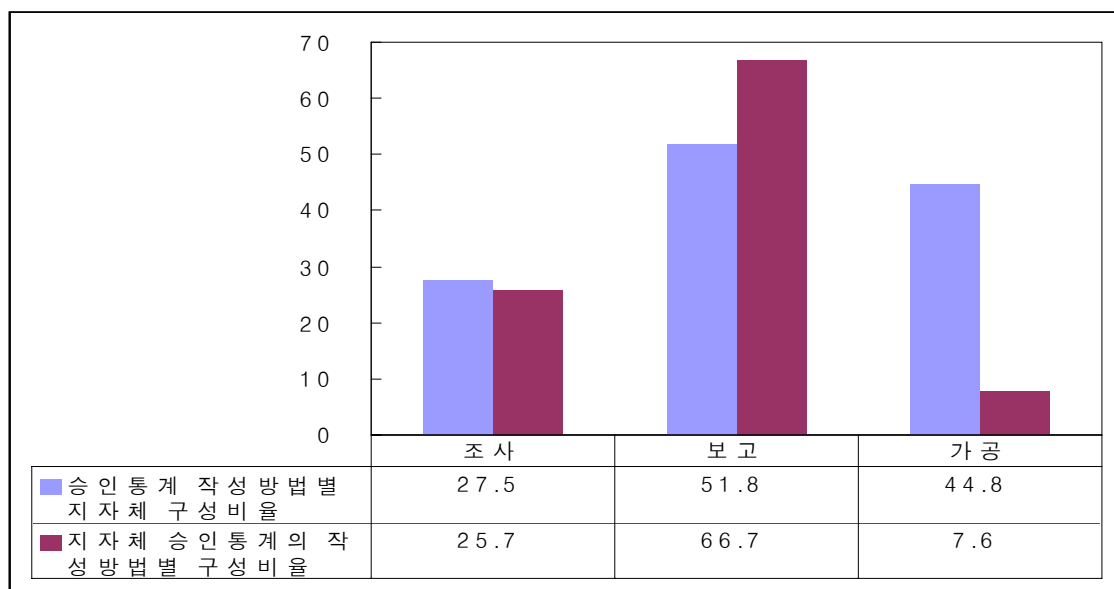
주 1.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함.

2. 기타 지정기관은 금융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협회·단체, 기타기관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승인통계 작성 현황

(단위 :%)



1.2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 내용

1) 광역자치단체

- 보고통계: 교육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 가공통계: 시도기본통계, 지역내총생산(GRDP)
- 조사통계: 사회, 고용, 문화, 기업경영,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 및 고용 분야 조사통계 현황은 <표 2>와 같음.

〈표 2〉 광역자치단체의 사회 및 고용 분야 조사통계 실시 현황

사회 분야	고용 분야
경기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강원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경남 경남사회통계조사	경기 시군구별고용통계조사(18개)
경북 경북인의생활과의식조사	
광주 광주사회통계조사	
부산 부산사회통계조사	
서울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보건지표조사	
울산 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인천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전북 전북사회통계조사	
충남 충남여성결혼이민자가정실태조사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의 국가승인통계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성.

2) 기초자치단체

- 보고통계: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시도기본통계
- 조사통계: 사회, 고용, 농림, 광공업, 수산 분야 등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많이 실시되고 있음(〈표 3〉참고).

〈표 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통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현황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강원 춘천시, 태백시	강원 태백시
경기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여주군, 용인시, 하남시	경남 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경남 진해시	부산 해운대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중구	전북 군산시, 전주시
부산 해운대구	충북 제천시
서울 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중구	
전남 광양시, 군산시, 전주시	
충남 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의 국가승인통계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성.

2. 지자체 성 인지 통계 관련법 및 정책

2.1 관련법

지방자치단체의 성별 통계 작성은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통계법 제18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리고 각급 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도 성별 통계 생산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서는 광역자치단체 등이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성별 구분을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해당 자치구가 조사, 관리하는 통계 및 자료의 성별 구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각종 업무 통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통계사무운영규정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특히 통계심사관의 임무로 통계작성 방법 등의 타당성, 통계작성 서식의 합리성 여부 등을 심사·통제토록 하고 있음(<표 4> 참고).

<표 4> 각급 지자체 성 인지 통계 작성 관련법 및 법규의 주요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여성부)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통계청)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정보화기획담당관)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심사관의 임무) ① 통계심사관은 통계의 작성,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사전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2. 통계의 작성방법, 작성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 4. 통계작성 서식의 합리성 여부
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정복지과)	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예산과)
제16조(여성정보제공, 통계자료의 성별표기)②구청장이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통계심사관의 임무) ①통계심사관(동사무소의 통계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일등의 타당성 여부 4. 통계조사서식의 합리성 여부

주. 괄호는 소관부처 및 부서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등을 바탕으로 구성.

* 통계사무운영규정, 통계사무운영규칙, 통계사무처리규칙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통계사무운영규정으로 통칭함.

그리고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은 통계법 비적용 통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수단임. 그것은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의 적용 대상이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량적 정보(통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임. 즉,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 내부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가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의 중요한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표 5> 참고). 이것은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의 성 인지적 개선을 통한 일선 지자체의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성 인지 통계 생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임.

<표 5> 통계법과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의 적용 대상

통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 가.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출 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 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 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통계 및 그 이외의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에서 조사, 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 및 서울특별시(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지정 및 일반통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통계”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계로써 통계 조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통계로 설정된 통계를 말한다. 2. “일반통계”라 함은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써 보고의 목적이 주로 통계작성에 있는 것으로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는 통계를 말한다.

2.2 지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사업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 인지 통계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의 ‘제7장 여성행정부문’에서는 부산여성발전기반의 지속적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부산여성통계연보 발간, 지역통계생산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성인지적 지역 통계 구축 등이 포함된 ‘3.1 성인지 통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그림 2> 참고).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최근 수립한 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성 인지 통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2007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성 인지 통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음(여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2008).

〈그림 2〉 부산광역시의 성 인지 통계 사업 사례

제7장 여성행정부문

제3절 부산여성발전기반의 지속적 정비 및 강화

3.1 성인지 통계 구축

□ 추진목표

- 여성통계 구축
- 성인지적 지역통계생산

□ 추진방향

- 부산여성 기초통계자료의 체계적 발간
- 여성관련 통계의 생산 및 통계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 기존 지역통계체계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통합

□ 사업개요

- 부산여성통계연보 발간
 - 지역여성의 현황과 지위를 폭넓게 다루는 여성통계 생산 및 주기적 보고서 발간
 - 인터넷 등을 통한 신속한 자료갱신과 보급을 통한 통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구축된 여성통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예, 여성발전기금사업 중 여성통계활용방안 사업 공모 등)
- 성인지적 지역통계생산
 - 지역 통계생산 기획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지역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의 성별구분을 의무화하는 자치법규 개정
 - 부산시의 승인통계 5종 중 성인지적으로 재편집하는 방안 연구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 실행

□ 추진계획

사업명	내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성인지적 통계구축	부산여성통계연보 발간	-	발간	조사 연구	발간	조사 연구	발간
	지역통계생산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5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성인지적 지역통계 구축	-	사전 연구	시범 실시	시범 실시	확대	확대

자료: 부산광역시, 2004.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3.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생산 현황

3.1 국가승인통계 성별 분리 현황

2007년 9월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의 성별 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성별 분리 가능한 통계는 354종임. 이 가운데 성별 분리가 가능한 모든 항목을 분리한 경우는 21.2%, 일부만을 분리한 경우는 75.7%로 나타남, 이처럼 부분분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별 분리 가능 항목의 상당수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 시도기본통계가 지자체 국가승인통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표 6〉 국가승인통계의 작성기관별 성별 분리 현황

(단위: 종, %)

작성기관	분리	부분분리	미분리	전체
중앙행정기관	119(37.5)	59(18.6)	139(43.8)	317(100.0)
지방자치단체	75(21.2)	268(75.7)	11(3.1)	354(100.0)
금융기관	3(16.7)	1(5.6)	14(77.8)	18(100.0)
공사,공단	15(48.4)	6(19.4)	10(32.3)	31(100.0)
연구기관	20(76.9)	4(15.4)	2(7.7)	26(100.0)
협회,조합	5(11.1)	10(22.2)	30(66.7)	45(100.0)
기타기관	6(54.5)	0(0.0)	5(45.5)	11(100.0)
전체	243(30.3)	348(43.4)	211(26.3)	802(100.0)

주 1. 분리는 성별 분리 가능 항목을 모든 분리한 경우, 부분분리는 성분 분리 가능 항목의 일부만을 분리한 경우, 미분리는 성별 분리 가능 항목을 전혀 분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2.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 포함.

3. 위 분석은 2007년 9월 13일 현재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 활성화 방안.

3.2 여성통계집 발간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통계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부서에서 발간을 시작하였음. 1997년 인천광역시의 ‘인천여성통계’가 가장 먼저 발표되었으며, 1998년에는 대전, 대구, 제주 등에서 여성통계집을 발간하였음. 그리고 2003년 고양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통계집을 발간하였고, 2007년 서초구에서 ‘통계로 보는 서초 여성’을 발간하였음(〈표 7〉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통계집들은 국가 통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당 지역의 통계를 자세히 다루어 풍부한 성 인지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근 발간된 여성통계집과 지자체 통계연보의 성 인지 통계 정보량을 비교하면 여성통계집이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성 인지 통계 정보를 상당 정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8〉 참고).

반면 현재 발간되고 있는 지자체 여성통계집의 대부분이 2년 주기로 발간됨에 따라 시의성 있는 성 인지 통계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자체 자체 조사통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됨으로써 성 인지 통계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임(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표 7〉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통계집 발간 현황: 2008. 7 현재

	발간물 명칭	발간년도
서울시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4, 2005, 2006, 2007
부산시	부산여성통계	2005, 2007
대구시	대구여성통계	1998, 2005
인천시	인천여성통계	1997, 1998, 1999
광주시	광주여성통계	1999
대전시	대전여성통계	1998, 2003, 2005
울산시	울산여성가족통계연보	2007
경기도	경기여성통계	2000, 2003, 2005
	경기도 시·군별 가족여성통계	2008
강원도	강원여성통계	2003, 2005, 2006
충청북도	충북여성통계	1999, 2005, 2007
충청남도	충남여성통계	1999, 2001, 2003, 2005, 2006
전라북도	전북여성통계	1999, 2001, 2003, 2005
전라남도	전남여성통계	2004
경상북도	경북여성통계	2000, 2004
경상남도	경남여성통계연보	2004, 2005
제주도	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2002, 2004, 2006
고양시	고양여성통계	2003
서초구	통계로 보는 서초여성	2007

주. 경기여성통계는 2006년판부터 경기여성가족통계로 명칭 변경됨.

〈표 8〉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와 여성통계집의 성별 통계 정보 수록 현황

(단위: 개, %)

		성별분리	성별미분리	성별분리불가	전체
A광역시자치체	통계연보	51(17.1)	86(28.9)	161(54.0)	298(100.0)
	여성통계연보	338(84.1)	38(9.5)	26(6.5)	402(100.0)
B기초자치체	통계연보	33(20.0)	47(28.5)	85(51.5)	165(100.0)
	여성통계연보	48(100.0)	0(0.0)	0(0.0)	48(100.0)

주. 성별분리는 성별 분리 가능한 통계표를 분리한 경우, 성별미분리는 성별 분리 가능한 표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성별분리불가는 성별 분리를 할 수 없는 통계표를 의미함.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여성정책 관련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지지체의 성 인지 통계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성 인지 통계 정보량과 시의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3.3 조사통계 사례: 기초자치단체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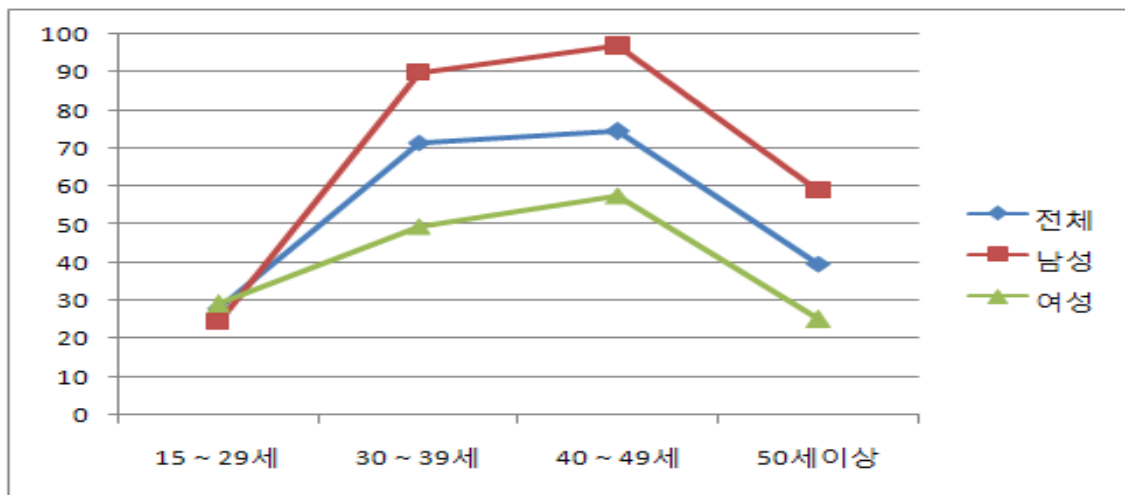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사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특히 2008년 7월 현재 1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통계청은 2008년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1회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할 예정임.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전국이나 광역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정보가 증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한국 여성 경제활동의 독특한 특징인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현상(M자형 곡선)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임.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는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10세 단위로 제시되고 있어, 통상 5세 단위에서 파악하는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3> 참고).

<그림 3> 전주시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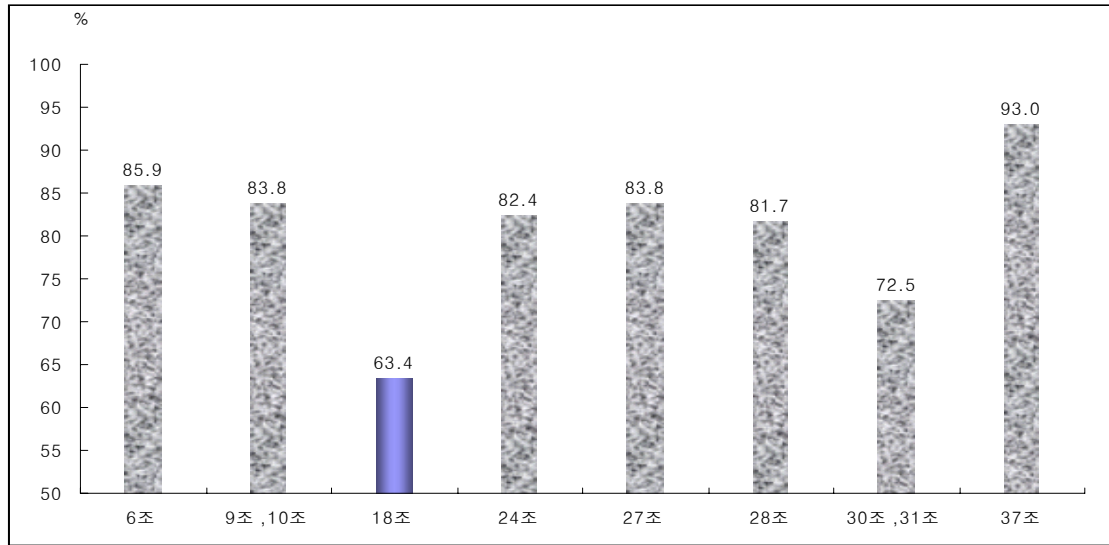


자료: '전주시 2007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4. 성 인지 통계 관련 인식

문유경 등(2007)의 조사에 의하면 227명의 각급 기관의 통계 담당자 가운데 여성 발전기본법 제13조 3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조사 대상의 54.6%로 나타남. 그리고 동일한 응답자의 62.6%가 2007년 통계법 전면 개정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이들 통계법 전면 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개정 통계법의 세부 내용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른 조항들에 비해 특히 통계 작성 시 성별구분 의무를 규정한 제18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그림 4〉 통계 담당자의 개정 통계법(2007년 4월) 내용별 인지도



주. 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과 운영, 9조·10조 -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9조, 10조),
18조 - 통계작성 시 조사사항에 있어 성별 구분 의무, 24조 - 행정자료의 제공의무 도입,
 27조 - 통계결과가 통계작성 완료시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변경, 28조 - 통계자료의 보급 확대 관련, 30조·31조 - 통계 원자료를 제공할 의무 규정, 37조 -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계청장의 시정 요구

자료: 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 활성화 방안.

개정 통계법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외에 성 인지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성 인지 통계 생산에 따른 업무 및 예산 부담, 의사결정자의 인식 부족, 특정 업무 분야에서는 생산 가능한 성 인지 통계가 없다는 인식 등이 지자체의 성 인지 통계 생산의 어려움으로 지적됨.

5.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5.1 통계사무운영규정의 성 인지적 개정 등 제도적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통계를 통계법 적용 여부 및 국가통계승인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개정 통계법 시행 이전의 국가통계로 승인된 경우에는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는 국가통계품질진단사업을 통해 성 인지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 해당 통계의 성별 구분 포함 여부, 신규 성 인지 통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이들 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이 가능할 것임<표 9>의 ①).

다음으로, 개정 통계법 이후에 승인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 과정에서 성별 구분 포함 여부 등 통계법의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이 가능할 것임<표 9>의 ②>.

세 번째로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자체 통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통계사무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성 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통계심사관의 임무에 심사 대상 통계의 성별 구분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추가되어야 할 것임(<표 9>의 ③).

이들 통계가 특히 중요한 것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수행 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자체가 각종 사업 및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계 자료를 일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의 상당 부분이 성별로 분리되지 않은 채 생산되고 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지자체 통계사무운영규정 개정 이전부터 작성되고 있는 통계법 비적용 통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 인지적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포함한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임(<표 9>의 ④).

<표 9> 지역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기존 통계	신규 통계
개정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	①성 인지적 통계품질진단 · 성별 분리 현황 점검 · 신규 성 인지 통계 수요 조사	②개정 통계법에 의한 승인
개정 통계법 비적용대상 통계	④성 인지적 개선의 지속적 추진 ·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지속적 추진 ·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 컨설팅	③통계사무운영규정의 개정 · 통계심사관의 임무 등에 성별 문항 포함 여부 점검을 규정 · 적용범위의 명확화

5.2 성 인지 통계 개선 상황의 주기적 점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의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각종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성별 통계 생산에 대한 검토 보고서’ (가칭)를 매년 발간하여, 지자체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의 성별 분리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별 통계작성 기관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 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성별 통계 생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보고하는 점검 결과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외국의 성 인지 통계 생산 점검 사례

- ①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 통계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성별 통계 생산 현황 점검 결과를 계량화하여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발표

- ② 영국: 2007년 성평등의무관제(Gender Equality Duty)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관련 정보·수집이 포함된 성평등계획서(Gender Equality Scheme)와 해당 계획서의 이행 점검 보고서(Review) 작성

5.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통계 개발 및 조사 실시

성 인지 통계는 단순히 성별 분리 통계만을 의미하지 않음. 성별 분리 통계가 성 인지 통계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성 인지 통계는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임.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젠더 이슈, 여성정책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성 인지 통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통계 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앞서 살펴본 강원도의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충청남도의 ‘충남여성결혼이민자가정실태조사’, 사회분야 조사의 여성 관련 문항 등은 성 인지 통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젠더 이슈와 관련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성 인지 통계 조사 실시 전략으로 현재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고용통계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계획에 의하면 2008년 1회 실시되는 시군구고용통계조사는 2009년부터 연 2회 실시될 예정임. 그러므로 시군구고용통계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젠더이슈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5.4 성 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확대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확대 및 다양한 여성정책추진에 따라 각급 지자체에서 보다 풍부한 성 인지 통계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발간하고 있는 여성통계집의 발간 주기를 1년으로 함으로써 보다 시의성 있는 성 인지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여성통계집 발간을 230개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예산과 기술 한계로 인해 여성통계집 발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통계집 발간에 필요한 일정 예산을 여성부가 지원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 여성통계집 발간 경험을 축적한 연구기관이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통계집 발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기존 지자체 여성통계집은 보고통계 중심의 내용 구성의 한계를 갖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제안한 시군구고용통계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성 인지 통계 정보를 여성통계집에 수록함으로써 내용 상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책자 형태의 여성통계집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통계집을 DB화하고, 본원의 지역 성 인지 통계DB와 연동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 지역 성 인지 통계DB 초기 화면



자료: 지역 성 인지 통계DB 홈페이지(<http://gsis2.kwdi.re.kr/>).

5.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프로슈머인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성 인지 통계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현재 공무원 대상의 성 인지 통계 교육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성별영향평가과정, 성 인지력 향상 교육 과정, 성 인지 통계 전문 과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현재와 같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성 인지 통계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성 인지 통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 인지 통계 관련법 및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통계청, 여성부 등은 협조공문 형태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관련 공무원(예, 통계사무운영규정 담당부서, 여성정책 담당부서 등)에게 개정 통계법 등 관련법과 정책을 홍보하여 관련법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여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2008년 워크숍(제주 샤인빌리조트, 2008.5.29-30) 자료집.

문유경 · 전기택 · 주재선. 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문유경 · 주재선. 2004. 성 인지 통계혁신 전략. 여성부.

부산광역시. 2004.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